

“보훈 체감형 복지 모델 도입하겠다”

민주 이원택 의원, 보훈 가족 복지체계 강화 공약 발표 전북 보훈수당 250% 인상, 농생명·AI 등 인프라 결합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참전·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훈 가족 복지체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훈수당 최대 250% 인상과 함께 농생명·AI·유통 인프라를 결합한 ‘보훈 체감형 복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북의 보훈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자치도 보훈수당 지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지역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2만4,000여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시군 지원금을 포함해 10만~16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비 지원금은 최대 4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비 지원을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250%) 참전유공자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150%)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마중물로 시군 지원까지 접진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



고 실질적인 예우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보훈 정책도 ‘생활 밀착형’로 전환한다. 전북의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보훈 푸름이 사업’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고품질 보훈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이들의 건강 지원과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홀로 거주하는 보훈 가정에 AI 스피커와 IoT 기기를 보급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응급기관 및 가족과 즉시 연결

되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한다.

임실호국원 일대를 활용한 ‘보훈 힐링 공원’ 조성도 추진한다. 묘역 중심 추모 공간을 치유 정원과 산림 휴양, 역사 교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유가족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찾는 보훈·여가 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원택 의원은 전북 도내 보훈화관 시설 개선과 호국 순례 프로그램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훈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전북이 먼저 보훈의 품격을 바로 세우고 지역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 예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검증된 추진력... 전북 대도약 이끌 책임자”

전북 목회자·경제인 단체, 김관영 도지사 지지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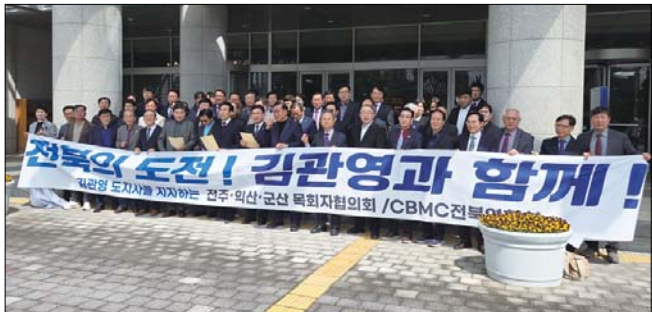
전주·익산·군산 지역 목회자협의회와 CBMC 전북연합회(회장 오정현 장로) 소속 회원 50여명이 지난달 3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지도자는 갈등을 조정하는 인물이 아니라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의 리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후보 지지 이유로 △검증된 추진력 △협치와 소통 능력 △따뜻한 복지 행정 △정치적·책임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특히 “인선 8기 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며 “전북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전주·익산·군산 지역 목회자협의회와 CBMC 전북연합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지난달 3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지지 선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김관영 후보에게 다시 한번 전북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이들은 “이번 지지 선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김관영 후보에게 다시 한번 전북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오감으로 체감하는 변화... 도민 삶 바꾸겠다” | 김종담 민주 도의원 예비후보, 5대 핵심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김종담 예비후보가 “오감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아우르는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도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책은 말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체감형 도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고, 듣고, 느껴지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김종담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일자리·주거·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반을 구축해 청년이 머무르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는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다. 김 예비후보는 “복지는 제도 가 아니라 삶에서 체감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전달되는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내놓았다.

이어 네 번째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안전 강화를 제시하며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는 디지털 AI 기반 전북 혁신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해 공장, 농업,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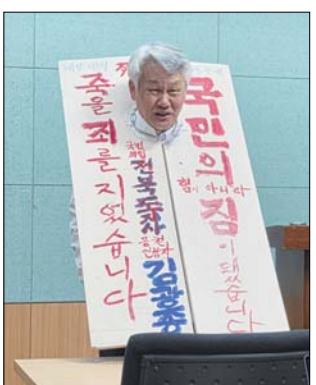
김종담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며 “신의로 시작해 책임으로 완성하는 정치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 5000조 시대 열어 전북 살리겠다”

김광중 국힘 도지사 예비후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유망하게 공천을 신청한 김광중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5000조 시대를 열어 전북을 살리겠다”는 등 정책 공약을 선보이며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분양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월세 수입이 전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전북은 5000조원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전면 부채 탕감,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 후 탈성매매 여성 지원 특별법 제정,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원 가정 양육비 지원, 전국 임대아파트 현 임대료 수준 토지임대부로 분양(비용 무임), 전복 전주를 교육 특구 및 제2 행정 복합 도시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며 당의 혁신을 강조하는 한편, “30% 지지만 얻어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돼 당명을 ‘이리랑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전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이유는 폐쇄적인 정치 구조 때문”이라며 “도민들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후보에게 70%를 주더라도 자신에게 30%의 지지율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양창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남원을 다시 성장 궤도로”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 나선 양창모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남원지리산 소극장 합동연설회에서 경제·인구·참여를 축으로 하는 도시 재설계 비전을 제시하며 “남원을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공동체 약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남원 안에서 돈이 벌리고 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민경제 밀집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국토부, 도시교통정비 촉진 하위범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전북 출신인 김은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올해부터 전 통시정당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범례 개정안’을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월에서 18일로 늘어난다. 납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 통시정당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까지 낮춘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심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가칭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근래에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업계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 정책과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작도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5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026년 10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d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시민의 삶으로 증명된 변화 흔들림 없이”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향후 시정방향 발표

정읍시장 경선에 참여 중인 이학수 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읍시장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읍은 지금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시민의 삶으로 증명된 변화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이 지리는 정읍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나누는 자리”라며 “지금의 선택이 정읍의 10년, 2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읍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금 은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라 쌓아온 변화를 완성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이 지리는 정읍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나누는 자리”라며 “지금의 선택이 정읍의 10년, 2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정 방향으로 △일자리 기반 확장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정

읍 △정읍형 청년·신호부부 반값 주택 공급 등 이이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도시 정읍 △정읍시민 햇빛 연계제 도입 등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도시 정읍 △머무르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현 시장 겨냥 괴문서, 나와 무관”



이상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최근 지역사회에 확산된 이른바 이학수 괴문서와 관련된 자신과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성토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배포된 괴문서에는 △이학수 현 시장측의 재산 증식 의혹 △산내 농지의 불법적 취득 △쌍 투기 의혹 △현 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 증식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이상길 후보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유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약 본인이 이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책임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앞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길 후보는 또 “청정이 본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희망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상길 정읍시장 예비후보

회견을 통해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유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약 본인이 이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책임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앞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길 후보는 또 “청정이 본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희망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